



전경련 국제동향

6월 2째주

국제본부 국제경제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① 역내·역외 위안화 환율 스프레드 급격히 축소
- ② 중국 국가통계국, '16.5월 CPI, PPI 통계 발표
- ③ 재정부, 제3차 전국 민관협력프로젝트(PPP) 리스트 선정 작업 개시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① 일본, 엔고 흐름 재개 및 7월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부상
- ② 일본정부, 한국을 WTO에 제소
- ③ 일본 은행권, 세계 최초 가상통화 독자개발 및 일반발행 추진

3 OECD 주요 정책동향

- ① IEA,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준회원국과의 협력 활동 논의
- ② OECD 유럽연합 및 유로지역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퀸즈랜드(QLD)주 주요 경제동향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역내·역외 위안화 환율 스프레드 급격히 축소

- ‘16.6.6(월) 하루 동안 위안화의 역내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가치상승)한 반면 역외 환율은 크게 상승(가치하락)하면서 역내·역외 위안화 환율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
- ※ 위안화 환율 스프레드: 중국 국내 거래시장과 국외 거래시장에서 각각 적용되는 위안화 환율의 차이를 말하며, 스프레드가 클수록 양 거래시장간 환율차이가 크고 헷지 세력의 차익실현 거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역내 위안화 환율 중간 값은 1달러당 6.5497위안으로 전일 대비 0.0296위안(0.45%) 상승한 반면, 역외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6.5674위안으로 전일 대비 0.0283위안(0.43%) 하락함.
- 역내 위안화 환율 하락(가치상승) 원인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인민은행이 중·미 전략경제대화 기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외환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6.5월말 기준 3.2조 위안으로 전월 대비 190억 위안 하락에 그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
- 반면 역외 위안화 환율 상승(가치가락) 원인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 내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세력들이 하루라도 빨리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위안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
- 일부 전문가들은 같은 날 역외시장에서 중국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입 정황이 포착된 것도 위안화 환율 상승 원인의 하나로 분석

1-2 중국 국가통계국, '16.5월 CPI, PPI 통계 발표

- 6.9(목)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6.5월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이하 'PPI')는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
- '16.5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3.6% 상승하면서 당월 CPI의 0.77%p를 끌어올렸고, 신선채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하여 당월 CPI의 0.14%p 상승을 야기
- 이외에도 의료보건 기타용품 및 서비스, 거주, 의류, 교육문화, 생활용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각각 3.5%, 2.2%, 1.6%, 1.5%, 1.2%, 0.6% 상승하고 교통통신 가격만 2.6% 하락
- CPI가 전월대비 하락한 이유는 주로 신선채소 가격 하락 때문이며, 연 초 이후 급격한 한파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선채소의 생산과 운송에 차질을 빚어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가격하락 주도
- 한편, PPI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은 '16.4월에 비해 0.6%p 축소됐으며, 석유·천연가스 채굴(21.5%↓), 석유가공(15.6%↓), 석탄채굴·선광(10.2%↓), 유색금속 제련·가공(7.7%↓), 화학제품 제조업(5.4%↓) 등 전 업종이 하락세를 유지

1-3 재정부, 제3차 전국 민관협력프로젝트(PPP) 리스트 선정 작업 개시

- 6.12(일) 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20여개 부처·위원회 공동 통지문을 통해,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대·중요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을 제3차 전국 민관협력프로젝트(PPP) 리스트*로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한다고 발표

* 전국 민관협력프로젝트(PPP) 리스트 사업 개요

- '14.11월 재정부는 민간 투자가 가능한 공공 서비스, 도시 건설 등 30개 시범사업을 선정, 투자규모 1,800억 위안에 달하는 제1차 전국 PPP 리스트를 발표

- '15.9월 총 206개 프로젝트(1차 리스트 내 시범사업 포함)를 선정, 투자규모 6,589억 위안에 달하는 제2차 전국 PPP 리스트를 발표
- 재정부 담당자는 각 성(省) 정부는 △민관협력 기간 10년 이상, △에너지·교통·시정·환경 등 PPP 모델 차용 가능 프로젝트, △기존 도시 전체 기획 혹은 특별기획에 포함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작업을 완료한 프로젝트에 한해 각 성(省) 정부 당 50개 프로젝트를 제3차 PPP 리스트 선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
- 한편, 상기 통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프로젝트 건설만 위탁하고, 운영권 등을 부여하지 않는 건설-이전(Build-Transfer, 이하 'BT') 방식, △최저 입찰가 보증 요구, △건설 완료 후 지방정부에 대한 환매 요구, △비공개 입찰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3차 PPP 리스트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리스트에 선정되더라도 상기 방식을 차용한 프로젝트는 제3차 PPP 리스트에서 제외할 계획.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일본, 엔고 흐름 재개 및 7월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부상

1. 엔화강세→주가약세 흐름 재개, 외환개입 경계감 확산

○ (엔/달러 환율, 1개월 만에 최고수준) 6.3 미 고용통계 발표 이후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초 증가(5.30 달러당 111.1엔) 대비 4.0% 절상된 106엔대 후반으로 급등하며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또한, 미 증시 급락 및 엔화 강세장 전개(자동차 등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우려)로 닷케이평균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등 엔/달러 환율과 주가 연동성이 한층 더 강화

○ (외환개입 경계감 확대) 시장 전문가들은 앨런 미 연준의장이 6.6 예정된 강연에서 추가 금리인상 신중 입장을 시사할 경우, 엔화환율이 달러당 105엔 후반대로 재진입(5.3일 105.6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02엔 부근까지 일시 급등 가능성도 일부 제기

* 라엘 브레이나트 미 연준 이사는 6.3 워싱턴 강연에서 미 고용지표 악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영국 EU 탈퇴 문제·중국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추가 지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6월 추가 금리인상 단행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 이 경우 급격한 변동성을 우려하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상승세 제한), 일본정부·일본은행·시장 참가자간의 심리전이 격화되는 조짐

2. 일본은행 7월 추가 금융완화 조치 기대 부상(6.6 일본경제신문)

○ (7월 추가 완화설 우세) 미 연준의 FOMC 회의결과(6.16 새벽)와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결과(6.16 정오)는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나, 2016년 1/4분기 GDP 개정치(6.8 발표)와 시장상황 개선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에

대한 추가 금융완화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 제기

- (6월 단행 시나리오) 미 고용통계 충격에서 촉발된 엔 반등과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일정 등으로 6월 완화설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 혼란 적시 대응 곤란(추가정책 발표 한계), 참의원 선거(6.22 공시→7.10 개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 직면 가능성이 존재
- (7월 단행 시나리오) 현재까지는 7월 완화설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나, 회의일정(28-29일)상 영국 EU탈퇴→시장혼란 문제 등에서 낙장대응 비판에 직면할 리스크
- (6-7월중 임시회의 개최) 6월 정례회의에서 금융정책 현황 유지 결정→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발표→7월 정례회의 전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

※ 금융정책 관련 당면 주요 일정

6월	14-15일	미 연준 FOMC 개최
	15-16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22일	참의원 선거 공시
	23일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
7월	10일	참의원 선거 개표
	21일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26-27일	미 연준 FOMC 개최
	28-29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 △물가 하락압력 확대, △엔고 장세 전개, △중국 등 신흥국 불안 고조, △외환개입 이견 및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 등 미·일 양국 간 통화마찰 지속 등 최근 경제금융상황 변화 감안 시, 6-7월 중 추가 완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금융 불안→경기침체로 이어질 리스크 잠재

* S&P를 제외하고 무디스와 피치는 추가 증세 재 연기 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

- (중앙은행 발권(發券)력 동원 필요)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 등 해외 유수 언론과 전문가(아테어 터너 전 영국 재정청 장관)는 일본과 같은 경제상황(국가채무 위기·민간수요 부족 직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처럼 간접적인 금융정책 수단으로는 총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없다고 지적, ‘헬리콥터 머니’와 같이 지금의

양적완화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

- *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뿌리는 방법으로 발권한 돈을 전 국민의 계좌에 입금해 주거나 모든 국민에게 유효 기한이 있는 상품권을 배포하여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 → 국가채무 완화 효과도 기대
- 일부 언론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헬리콥터 머니와 같은 극단적인 부양책을 쓸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야말로 다른 아닌 헬리콥터 머니라고 주장(WSJ 6.2)

2-2 일본정부, 한국을 WTO에 제소

1. (닛케이신문) 일본, 밸브 추가과세 문제로 한국을 WTO에 제소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제 밸브에 대해 부당한 추가과세를 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함.
 - 2016.4월에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기 때문
 - (향후 전망) 이르면 2016.6월 하순에 제3국 법률가 및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이 설치될 예정임.
2. (요미우리신문) 한국의 밸브 반덤핑관세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한국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관련, 일본정부가 6.9 WTO에 제소함.
 - (그간 경위) 일본정부는 일본산 제품은 고성능 제품인바, 용도가 다른 한국제품과는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4월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료됨.
 - (韓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한국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부당하

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한국 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 등의 이유로 2015.8월부터 약 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향후 전망) WTO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이 오는 7월 하순 이내로 설치되어 1년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됨.

3. (아사히신문) 한국의 추가관세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 덤핑을 부정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 제품(공장 자동화 라인용 장치의 부품에 사용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WTO에 제소함.

- (韓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한국은 2015.8월 부당하게 싼 제품으로 인해 한국 제조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본 제품에 대해 주로 약 12%의 추가관세를 5년간에 걸쳐 부과하기로 함.

- (日 반응) 상기 한국의 반덤핑과세 조치에 따라 일본 측 제조사의 부담이 최대 37억 엔에 달하면서 업계가 반발하였으며, 일본 측은 △(일본 제품이) 자동차, 반도체 등 공장에서 사용되는 정밀도가 높은 부품 위주이며, △가격도 한국 제품에 비해 비싸서 경쟁하고 있지 않은바, 손해를 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4. (마이니치신문) 한국을 WTO에 제소- 일본제 밸브에 대한 관세는 '위법'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제 밸브에 대해 부과중인 반덤핑관세는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함.

- 또한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

- (그간 경위) 과거 일본정부는 2016.3월에 한국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하여 2016.4월에 실시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소를 단행, 일본이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을 제소하는 것은 최초임.

- (日 반응) 밸브는 압축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으로 공장의 제조 라인 등에서 사용되는바, 경제 산업성은 '일본제 밸브는 반도체 및 자동차 등의 고도 제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어,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한국제와 경쟁관계가 아니다. 관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한국은 2015.1월 일본 업체의 덤핑으로 한국 산업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2015.8월부터 11.66~22.77%의 과세를 개시
- 한국에 밸브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SMC(도쿄) 등으로 일본제가 한국 밸브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
- 경제 산업성은 일본제품에 대해 5년 동안 총 37억 엔 상당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

5. (산케이신문) 한국을 WTO에 제소- 일본제 밸브에 대한 관세는 '위법'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일본제 공기압밸브에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 일본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을 제소하는 것은 최초임.
- (그간 경위) 일본정부는 2016.3월에 WTO 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에 협의를 요청, 2016.4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패널의 명확한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韓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한국은 일본제 밸브가 일본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되고 있다며 기존의 관세(8%)에 2015.8월부터 11.66~22.77%를 추가 부과함
- (日 반응) 일본 측은 △일본제 밸브가 고도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있는데 반해 한국제 밸브는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경쟁관계가 아니며, △2010년부터 4년간 한국제 밸브에 가격변동이 없었던 점을 들어 관세의 부당성을 주장할 태세
- (향후 전망) 일본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WTO는 6.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패널 설치에 대해 협의하게 되며, 7.21 개최 예정인 DSB의 정례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인정될 전망

6. (도쿄 신문)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 밸브 관세 관련

- (日 정부, WTO에 韓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WTO에 제소하였다고 발표함.

- 반덤핑조치 관련,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을 제소하였으며,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
- (그간 경위) 일본정부는 지난 3월 한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4월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소를 결정함.
- (한국의 과세조치) 한국은 2015.1월 일본 제조사의 덤핑으로 한국 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2015.8월부터 11.66~22.77%의 과세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산은 한국 밸브시장의 약 70%를 점유(SMC 등 기업이 한국에 밸브를 수출)하고 있으며, 日 경제 산업성은 일본 제품에 5년간 총 37억 엔 상당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
- (日 반응) 경제 산업성은 ‘일본산 밸브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고도의 제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식품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과 경쟁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3 일본 은행권, 세계 최초 가상통화 독자개발 및 일반발행 추진

1.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 세계 최초 일반인 대상 가상통화(MUFG 코인) 발행

□ (주요 특징) 당지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은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가상통화「MUFG 코인」을 금년 가을부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

○ 이용자는 MUFG에 개설한 예금계좌 잔고를 1코인 당 1엔 비율로 환전 후, 스마트폰을 통한 코인 거래 등을 통해 사용 가능

- 가상통화(앱) 이용자끼리는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도 가능해 여행·항공·외식업 등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프리페이드(선불식 지급) 방식으로 단순 지급결제만 가능하고 송금 및 자금수취가 불가능한 전자화폐(SUICA 등)와는 달리, 시중은행들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수

료로 이용자 간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

- 특히, 비트코인과 달리 가상통화 발행주체와 운영자가 명확하고, 법정 통화와의 교환비율도 일정해 비트코인처럼 교환비율이 거래소에서 결정(교환비율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환비율과 실제 환율의 괴리에 따른 환율 교란 및 투기 목적의 차익거래 위험도 차단 가능
- 비트코인 포함 현재 전 세계 가상통화는 무려 600 종류에 달하고 있으며, 기존 가상통화들은 교환비율 변동을 노린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보급이 제약된 측면
- 교환비율이 일정한 「MUFG 코인」 등장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저항감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MUFG 코인의 주요 특징

		발행자/운영자	이용자 간 거래가능 여부	법정통화 교환비율
가상통화	MUFG 코인	미쓰비시도쿄 UFJ은행	가능	1코인=1엔 (비율 일정)
	비트코인	없음	가능	비율 수시 변동 (투기대상으로 악용)
전자화폐	SUICA, WAON 등	JR 동일본, 이온 등	불가능	법정통화 충전 방식

- (향후 계획)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MUFG 코인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한 신형 현금인출기(ATM)을 개발 중이며, 2018년 봄부터 순차 설치할 계획
- 이 경우 MUFG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도 현금인출기를 통해 가상통화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와 함께 다양한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MUFG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 포인트 적립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중심으로 한 상권 구축에 매진

-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기반인 “블록체인(거래장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거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대형 컴퓨터 등 시스템 운영비)을 대폭 경감할 예정

2. 기대효과

- (건전한 가상통화 보급에 기여)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이용자는 약 1,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가총액 90억불(약 9,600억 엔)규모의 시장을 형성

- 다만, 법정통화와의 교환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거래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근래 들어서는 1비트코인 당 600불(약 64,000엔)까지 급등

- 일본의 경우 2014년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콕스” 파산사태로 가상 통화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 일본을 대표하는 은행이 가상통화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투기대상이 아닌 일반인 이용자의 접근 편이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가상통화를 선보인 점은 그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

- 특히, 저금리 시대에 수수료 부담을 막아줄 방패 역할도 기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지지층이 일정부분 확보되면 국내외 수요도 해마다 커질 것으로 전망

- (新성장산업 추동력 기대) 전문가들은 가상통화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소액 결제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신뢰성 있는 대형은행 코인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해질 경우, 웹 콘텐츠 유료화나 뉴스기사 판매 등 모바일 콘텐츠 시장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학 파이낸스종합연구소 고문)

3 OECD 주요 정책동향

□ 정보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3-1 IEA, 중국, 인도네시아,태국 등 준회원국과의 협력 활동 논의

1. 2015년 IEA Global Engagement Report 연례 보고서 발표

- 사무국은 IEA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글로벌 협력 활동의 성과를 △준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다자 협력 활동, △글로벌 협력 전략의 중기 목표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함
 - 준회원국과의 협력: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좀 더 공개되고 유연한 체제’라는 새로운 접근법 및 전략이 채택되었고, △2015년 11월 IEA각료이사회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과의 준회원국 체제가 시작되었으며,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현재 추진 협의 중
 - 지역단위 협력 활동: 동유럽코카서스중앙아시아(ECCA)지역, 중동북아프리카(MENA)지역, 남동아시아와 APEC지역 국가들과 협력 활동 중
 - 다자 협력 활동: △훈련과 역량강화(신흥국가 에너지효율성 훈련 주간 지원 등), △국제 저탄소 에너지 기술 기반 마련(공급망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법 발간 등), △기술 협력 프로그램(Technology Collaboration Programme, TCP)운영, △G7, G20, CEM, IPECC, IRENA,SE4ALL등과 협력 지속 중
 - 글로벌 협력 전략의 중기 목표 : △에너지 도전을 극복한 우수 사례 공유 증대, △정책 대화 및 역량 강화사업 확대, △수준 높은 에너지 통계의 접근성 확대 및 용이화,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 확대, △저탄소 기술에 대한 R&D 가속화, △국제 비상 대응능력 강화

2. 준회원국체제 / IEA 중국센터 업데이트

- 사무국은 지난해 시작된 준회원국(중국, 인도네시아, 태국)들에 대한 IEA 사무총장의 활동 및 각 분야별 활동 상황 등을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함

- 먼저 준회원국 관련 IEA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를 방문(2.11.), 발리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Jusuf Kalla 부대통령과 함께 클린에너지 센터(the Center of Excellence for Clean Energy) 개소를 하였고,
- △ 중국을 방문(3.29-30), IEA-중국 협력 20주년 행사 계기에 공동 에너지 센터 설립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표하였고, △ 태국을 방문(4.1.), 태국 에너지 정보 센터(Thailand Energy Information Centre)를 공동 개시하고 태국 전력 안보 보고서(Thailand Electricity Security Study)를 발표하였음
-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분야에서, 태국은 국내 위기 대응 훈련(3.14)을 IEA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태국 에너지부 주관으로 실시함
- 인도네시아는 전략비축유(SPR)를 에너지안보기금(EFD)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부 논의 절차를 개시하였고, IEA는 모든 준회원국을 초청한 가운데 6.29-30일에 파리에서 비상대응훈련(Emergency Response Exercise)을 실시할 예정
- 에너지 정보(Energy Data) 분야에서 중국은 IEA 협력 20주년 기념행사에서 Ning Jizhe 국가통계청장은 IEA는 중국의 에너지 정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IEA 중국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표명하였고,
-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보팀(PUSTDATIN)이 IEA를 방문(4.26-28)하는 등 활동
- 정책 분석(Policy Analysis) 분야에서 태국은 IEA의 태국 전력 안보 보고서 제안 사항들(태국 에너지 믹스 다변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수립, 에너지 효율성 향상 조치 강화)에 대해 동의하였고,
- 인도네시아는 ASEAN 발전설비 위원회(ASEAN Power Utilities/Authorities Committee Meeting)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화석연료 발전기에서 가스배출 감축계획을 발표
- o 또한 사무국은 IEA 중국 공동 에너지 센터(IEA-China Joint Energy Centre) 개설에 관해 3월 IEA 이사회가 아래 사항을 기초로 IEA 중국센터 개설을 지지하였다고 보고

- △IEA 사무총장과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IEA 중국 센터 개설을 선언(3.30.)하고, △동 센터는 IEA 회원국들과 중국에 상호이익이 되도록 운영하고, △2016년 말까지 센터 활동 개시를 목표로 사무국은 센터에 관한 운영 및 예산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 △센터는 최초 연락과 협력활동을 시작으로 IEA 회원국들과 중국의 자발적 기여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사무국은 주기적으로 이사회와 협의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할 것임
- o 아울러 사무국은 현 준회원국(중국, 인도네시아, 태국)과 후보국(인도, 브라질, 남아공) 외에도 모로코와 싱가포르와도 협의를 진행 중임을 설명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준회원국 체제의 범위, 초청국 선정 등 향후 준회원국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IEA 중국센터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예산 문제 등에 관한 진전사항을 문의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청함
- 사무국은 준회원국을 계속 늘려나갈 것인지, 기존 6개 국가에 집중하여 운영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등 준회원국 체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정립할 시점임에 공감하며 차기 IEA 이사회 시동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발표
- 또한 IEA 중국센터는 2월 SGD회의에서 지적되었던 법적 문제,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 내 기관간 협의 및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별다른 진전사항은 없어 동 센터 최종 설립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3. 멕시코 IEA 가입 동향

- o 사무국은 멕시코의 IEA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IDR(In-Depth Energy Policy Review)팀이 멕시코를 방문(4.4~11), 28차례의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여 예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에너지비상대응 정책에 관한 협의를 위해 IEA 사무국 법률국(OLC)과 비상정책국(EPD)에서도 멕시코를 방문(5.3~4)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

- o 또한, IEA는 멕시코와 비상 정책, 에너지 정보 및 통계 등에 관한 기술적인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고, 멕시코 에너지부(SENER) 법률실과는 관련 법, 규정 등 검토를 진행 중이고,
- 향후 정책검토(In-depth Review)팀이 예비보고서를 9월 SGD 회의시 보고하여 2016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안내
- o 회원국 중 스페인은 현재 멕시코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중 하나인 멕시코의 IEA 가입은 국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

4. 에너지 효율 분야 활동 / 기술 협력 프로그램(TCPs) 업데이트

- o 사무국은 IEA가 추진 중인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EA 내 기존 에너지환경국 에너지 효율팀(Unit)이 확대 개편되어 현재 에너지 효율과(Energy Efficiency Division)가 설립되었다고 설명
- o 에너지 효율성 논의와 관련하여 크게 △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로드맵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
- o (기술 네트워크 구축) 1975년 IEA 설립 시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 R&D를 촉진하는 틀로서 IEA의 실행합의서(Implementing Agreements, IAs)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였으며, 40년이 지난 2015년에 이를 새로운 브랜드인 기술 협력 프로그램(Technology Collaboration Program, TCPs)으로 전환(현재 전 세계 39개의 TCPs 존재)하여 기술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함
- 향후 TCPs는 상호연락을 강화하고 가시성을 증대할 예정일 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과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
- o (기술 로드맵) 2008년 G8(홋카이도)의 감독 아래 개시되어 현재까지 21개 기술 분야에 대해 32개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왔으며, 최근 2016년 G7(키타규슈)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기술 로드맵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음
- IEA는 우선(priority) 기술 선정을 통한 로드맵 마련 관련하여 △지원가능성(주요 기업과 정부가 협조적인지), △관련가능성(2025년까지 중요성이 더 증가할 것인

지)

- △혁신기술 격차 정도(현행 이행과 수요 간의 간격이 있는지), △재정지원 가능성(잠재적 재정지원가가 있는지), △동원가능 자원의 정도(IEA가 관련 동원 가능한 자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같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
- o 미국은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중국, 태국의 참여를 평가하고 인도네시아, 멕시코의 참여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CEM시 Mission Innovation(MI) 논의에서도 에너지 기술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소개하자 사무국은 MI 행사시 IEA에서 기술 로드맵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답변
- 한편 독일은 기술 협력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 지원 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사무국은 기술 협력 프로그램들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자원마련 수단들을 강구중이라고 답변

5. IEA와 중국 간의 협력 현황 업데이트

- o 사무국은 준회원국으로 SGD 참여 활동을 시작한 중국측 관계자들을 소개하며 IEA와 중국과의 관계 발전 연혁 및 최근 IEA 중국 센터 개시 선언시 발간한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관여’ 보고서를 요약 발표함
- o IEA와 중국은 1996년 상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후 19개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TCP)에 중국이 참여하고 2015년 비상 대응 훈련, 비전통 가스 포럼,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협력이 강화되어 IEA에는 중국 정부부처, 기업 및 연구소로부터 8명의 중국 파견 인력(seconded)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2014-2040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인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에너지 효율성 강조, 중국 경제의 서비스 분야로의 전환 등으로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수요는 이전 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석유, 가스에 대한 비중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 부연
- o 사무국은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의 IEA 파견자인 Julia Zhu에 의해 작성된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관여(China’s Engagement in Global Energy Governance)’ 보고서에 대한 발표회(3.31. 베이징)가 개최되었고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했다고 전함

-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태도를 외부자에서 내부자 (outsider to insider)로 변화, 추종하는 자에서 영향을 주는 자(follower to influencer)로 전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적극적인 참여자 (active participant)이자 형성자(builder) 및 기여자(contributor)로 변모,
- △현재 중국의 역할은 지대하나 내부 목표치에 비해 뒤쳐 있음, △점차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향후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소개됨
- 아울러 중국은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국 및 생산국을 망라하는 42개국과 양자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였으며, IEA, GEM, G20, APEC 등 국제 에너지 관련 기관 및 포럼들과도 협력해오고 있다고 설명.

3-2 OECD 유럽연합 및 유로지역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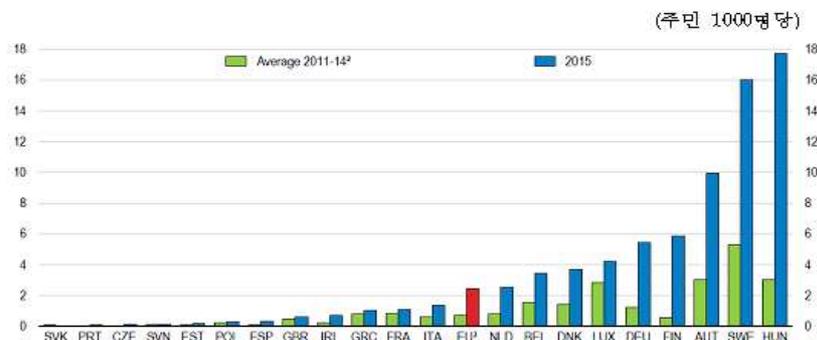
【유럽연합】

(1) 사회, 환경

가. 현황

- 난민(refugees) 유입은 유럽연합이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로 회원국들 공동 (collective)의 대처 필요

유럽연합 회원국별 난민 신청(asylum applications) 추이



1. Resident population at 1 January.
 2. 2014 only for Austria, 2012-14 for Finland and 2013-14 for Hungary.
 3. European Union 28 countries.
 Source: Eurostat (2016). "Asylum and managed migration" and "Demography and migration", Eurostat Database.

- 국가 간 조율과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비용 절감과 난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

- 유럽 연합 내 노동이동 장벽은 근로자격 검증(professional qualifications) 및

부가연금(supplementary pension) 수급 권한의 이동성 제한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 고기술 이주민 비중이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유럽연합 이외 지역의 이주민(non-EU migrants)에 대한 근로 요건이 더욱 표준화될(further standardised) 필요
-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과도한 배출허용량(emission allowances) 등으로 제한적

나. 정책권고

□ 유럽 연합내 노동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주민들의 근로자격 검증(professional qualifications) 절차를 간소화

□ 블루카드(Blue Card)* 발급 요건과 절차를 단순화하여 유럽연합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고기술 이주민 유입을 유도

* 유럽연합 집행위가 유럽 연합 내 전문 인력 부족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블루카드를 소지한 취업자는 모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회원국에서 근로할 수도 있음

□ 난민 신청자(asylum applicants)에 대한 행정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고, 승인 받은 난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배출총량(cap)을 낮추고, 탄소배출권 예비분(reserve of allowances)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변동성 완화를 도모하는 등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개선

(2) 시장 단일화

가.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단일화(single market) 진척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평가됨

○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단일화된 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금

-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리적 연계성을 높이는 가운데 교통부문의 규제 및 기술표준의 일관성을 제고(further harmonization)하여 경쟁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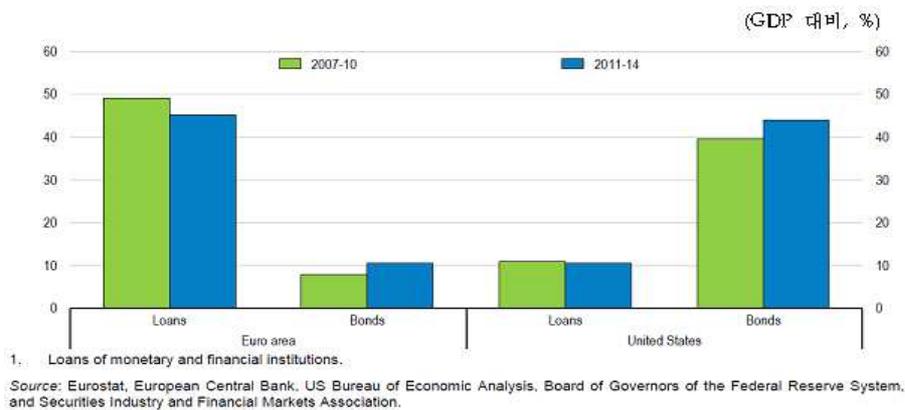
유럽연합 개관(2014년 기준)

지표	유럽연합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18,520	-
인구(백만명)	508.5	-
1인당 GDP(PPP, 천달러)	35.9	39.3
최근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1.0%	1.9%
고용률(만 15세~64세)	64.9%	65.7%
국가부채(일반정부, GDP대비)	86.8%	-
경상수지(GDP대비)	0.9%	0.0%
지니계수(2012년)	0.309	0.308

- 유럽의 금융시장은 국경에 따라 분절화(fragmented)돼 있으며, 금융중개 기능이 은행에 집중

- 자본시장의 국가 간 연계성을 제고하면 유럽 기업들의 은행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유럽과 미국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및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



- 역내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다각화를 통해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부문의 발전을 도모

- 은행 대출 외에 증권화(securitization), 커버드본드(covered bonds), 벤처 캐피탈, 사모 방식(private placements) 주식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필요

나. 정책권고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차원에서 증권화(securitization) 관련 규제를 완화
-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소형기업의 신용정보를 취합 및 공유
- 장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본 요건 및 회사채 시장 규제를 완화
- 온라인 상거래 규칙이 국가 간 일관성을 갖추도록 정비하고(harmonise), 지리적 위치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완화

【유로지역】

(1) 거시정책

가. 현황

- 유로지역 경제는 통화정책의 완화 등으로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높은 실업률과 투자부진이 장기간 지속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을 큰 폭 하회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유로지역 개관(2014년 기준)

지표	유로지역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13,411	-
인구(백만명)	338.5	-
1인당 GDP(PPP, 천달러)	39.1	39.3
최근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0.7%	1.9%
고용률(만 15세~64세)	63.9%	65.7%
국가부채(일반정부, GDP대비)	92.1%	-
경상수지(GDP대비)	2.4%	0.0%
지니계수(2012년)	0.310	0.308

- 유로지역 경제는 2016~2017년 연 1% 후반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완화적 통화정책, 중립적 재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OECD의 유로지역¹⁾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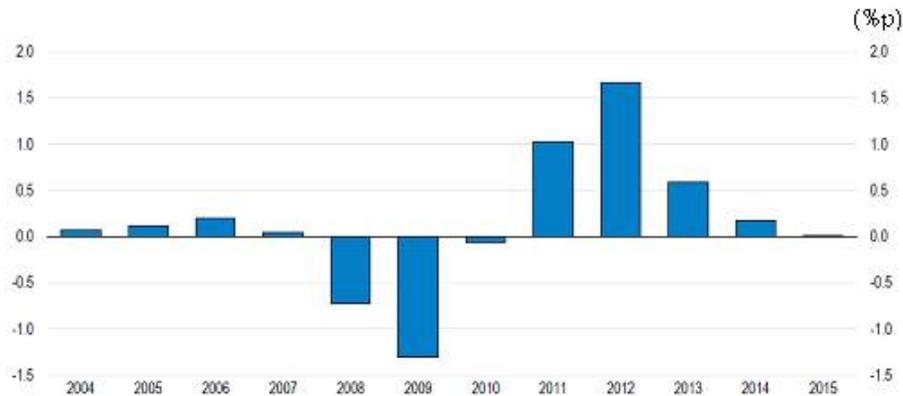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증가율(%)	-0.3	1.0	1.6	1.6	1.7
소비자물가상승률(%)	1.3	0.4	0.0	0.2	1.2
실업률(%)	11.9	11.5	10.8	10.2	9.8
경상수지(GDP대비, %)	2.9	3.1	3.8	3.8	3.6

주: 1) 유로 및 OECD 동시 가입한 국가 기준(총 15개국)

- 그간 추진된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공공투자가 감소하고 임금소득 과세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위기 발발 직후 유로지역 각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가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기조로 전환

유로지역¹⁾ 구조적 재정수지(underlying balance) 비율²⁾ 변동 추이



주 : 1) 유로 및 OECD 동시 가입한 국가 기준(총 15개국)
2) 집계 GDP 대비, %

- 재정정책 수립 시에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적절한 유연성(flexibility)의 기조 하에 국가예산 제도(framework)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데 유념할 필요

-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부채경감 규칙(debt reduction rule)이 고부채, 저성장 국가에 엄격히 적용될 경우 큰 폭의 재정조정이 수반될 수 있음에 유의

나. 정책권고

-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향하여 뚜렷한 상승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 기조를 지속
-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책 마련
-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부채경감 규칙(debt reduction rule)이 경기회복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
- 금융지원이 없을 경우 실시되기 어려운 고위험(high risk) 프로젝트에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지원 필요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성장의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출 및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이 추진 중인 경우 과도한 재정적자의 조정 시한을 연장

(2) 금융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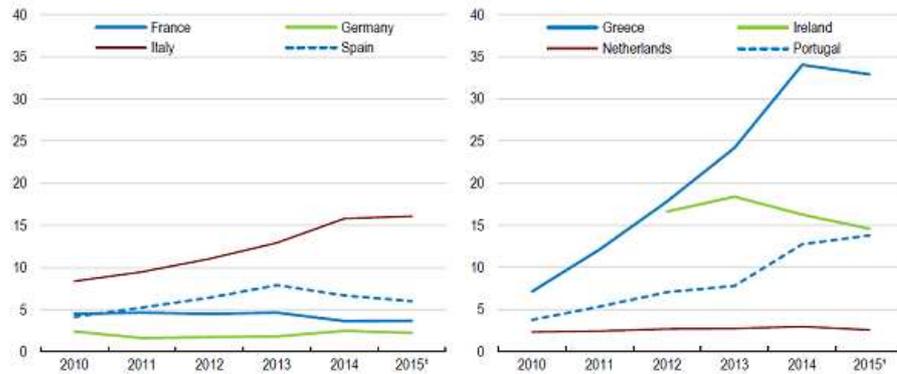
가. 현황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실업, 저투자, 저물가 문제 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 조율을 바탕으로 수요 진작과 금융부문 강화를 통한 신용확대 정책을 단호히 추진해 나갈 필요
- 일부 국가에서 부실여신(NPL) 비율이 여전히 높아 신용 확대에 어려움 가중
- 유럽의 은행동맹(banking union) 출범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일부 시행되었으나, 은행 규제, 예금보험제도 등에서 국가간 일관성 제고, 단일 부실은행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의 원활한 자금조달 필요
- 역내 금융기관의 당해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dependence)는 금융위기 발생 시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나. 정책권고

- 부실여신 관련, 필요시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ies)의 설립을 유로 차원에서 검토

유로지역 주요국가의 부실여신 비중¹⁾ 추이²⁾



주 : 1) 총여신에서 총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중
 2) 2015년은 1~3분기 평균

- 일정기간 이상 금융권이 부실여신을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s)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부실여신 문제 완화를 위한 감독조치 강구
- 국가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유로 차원에서 예금보험제도(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를 시행
- 역내 금융기관과 당해 정부 간 의존성 경감을 위해서는 단일 부실은행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의 원활한 자금 조달 필요

2. 관찰 및 평가

- 유럽연합은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으로서 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수요 회복은 우리 경제에 매우 긴요한 만큼 유럽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대응책 마련 필요
- 최근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제가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들의 사회통합에 소요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럽 각국의 공동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브렉시트(Brexit)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실물 및 금융경로를 통해 영국 및 유럽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퀸즈랜드(QLD)주 주요 경제동향

□ 정보출처 :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퀸즈랜드(QLD)주 주요 경제동향

1.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최대규모 풍력발전소 기공식

- NSW주 New England 서부지역 Glen Innes에 소재한 175 메가와트급 White Rock 풍력발전소 기공식이 2016.5.24.(화) 진행됨.
- 상기 사업은 총 70개 터빈 건축공사기간 18개월간 최대 4억 호불(\$40billion)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 NSW주 산업·자원에너지장관은 NSW주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목표(2020년 23.5%) 달성에 동참하겠다고 언급함.
- 현재 NSW주에는 최대 60억 호불(\$6billion) 규모의 총17개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완공 시 발전량은 최대 4천5백 메가와트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2.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세대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발표

- NSW주 재무부는 2016.5.26(목) 40년후 NSW주의 경제, 예산 및 인구증대 전망에 관한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표함.
- 2006년부터 5년마다 발간되어온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2056년 NSW주 인구는 총 1천120만 명(11.2million)으로 현재보다 약 5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고함.
- NSW주는 2056년 경제규모가 1조3천억 달러(\$1.3trillion)로 호주 내 최고수준 유지, 노동시장 참여율은 59%로 현재 64% 보다 다소 감소, 평균연령은 현재 37세에서 41세로 5년 상승, 기대수명 역시 남자는 8년 여자는 6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3. 퀸즈랜드(QLD)주 170메가와트 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 퀸즈랜드(QLD)주 총리는 2016.5.26 (목) Argon Energy사와 북부 QLD주 Mount Emerald 풍력발전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Mount Emerald 풍력발전은 연간 170 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 바, 현재 12 메가와트 수준인 QLD주 풍력발전량을 약 15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풍력발전소 건설기간 2년간 15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4억 호불(\$400million)의 경제적 파급효과, 풍력발전 운영기간 약 25년간 최대 9억 호불(\$900million)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퀸즈랜드(QLD)주 총리는 지난 총선 시 2030년까지 QLD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50%로 설정한바 있음.

4. 호주 2014-15 광산운영(Mining Operations) 통계 발표

- 호주 통계청은 2016.5.27(금) 2014-15년 호주 광산업 운영실적을 보고한 광산운영(Mining Operation) 통계를 발표함.
- 매출액(단위: 백만 달러)
 - 석탄 광산(Coal mining): \$45,869(-6.4%)
 - 오일 · 가스(Oil & gas extraction): \$40,369(+4.9%)
 - 철광석 광산(Iron ore mining): \$69,486(-12.6%)
 - 금 광산(Gold ore mining): \$13,695(+3.8%)
 - 보크사이트, 니켈 광산(Bauxite, nickel ore mining): \$7,903(+55.8%)
- 고용
 - 석탄 광산(Coal mining): 39,128명(-9.8%)
 - 오일 · 가스(Oil & gas extraction): 22,001명(-1.2%)
 - 철광석 광산(Iron ore mining): 29,306명(-3.0%)
 - 금 광산(Gold ore mining): 14,213명(-1.7%)
 - 보크사이트, 니켈 광산(Bauxite, nickel ore mining): 7,368명(+29.6%)

○ 주별 매출액(단위: 백만 달러)/고용

- NSW주: \$24,441/23,486명
- QLD주: \$37,413/39,727명
- VIC주: \$4,564/5,176명
- SA주: \$6,693/5,811명
- WA주: \$117,186/59,269명
- TAS주: \$828/1,537명
- NT준주: \$4,935/3,204명.